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

2010. 11. 23.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현황

II 국과위 개편방안

III 기대효과

IV 향후일정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역할

- 출연(연)·민간을 중심으로 해외 첨단기술을 단기간 모방·학습

➔ 경제·사회발전 견인

최근 국내외 환경

- 해외 각국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국내 기업의 성장 한계

현 정부의 시대적 임무

- '모방형' ➔ '창조형 혁신전략'으로의 전환
- 국가연구개발체계의 재정립이 시급

현황 및 문제점

국가 R&D 체계의 환경 변화

- R&D 부처, 사업 증가 ▶ R&D 종합조정 수요 확대
- R&D의 대형화·장기화·융합화 추세 ▶ 전문성 제고 필요

현 국과위 운영의 문제점

- R&D 정책조정·예산배분·성과평가 기능의 분산 ▶ 국과위의 종합조정력 미약
- 비상설 자문위로서 독자적인 집행력 한계
- 교과부 내 사무국 설치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문제

II 국과위 개편방안

추진경과

'09.11 ~ '10.6

출연(연) 발전 민간위 운영 및 제도개선(안) 마련

➡ VIP보고(6.22)

'10.7 ~ '10.9

관계부처 협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10.9.10.

당정협의

- 국과위가 정부R&D예산의 실질적 배분 · 조정 수행
- 출연(연) 선진화는 개편된 국과위 주도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국과위 위상강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설치

- 장관급 위원장 및 독립 사무처 신설

국과위 기능강화

정부 R&D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전주기 R&D 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국과위 위상강화 ①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설치

- 장관급 위원장 및 차관급 상임위원 2인
- R&D 예산 배분 · 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원제(차관급) 도입

현 재		개 편 후
대통령	위원장	장관급
교과부 장관이 겸임	부위원장	
비상설 자문(심의)위원회	위원회 형태	상설 행정위원회
불가능	자체 직제·예산·인사	가 능

국과위 위상강화 ②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 사무처로 확대 · 신설

구 성	• 별도 직제에 따라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	•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 전문성 강화 (50% 이상)
선 발	• 공무원은 전 부처 공모를 통해 선발후 전출 발령	• 민간전문가는 계약직 공무원 및 특채로 채용

현 재		개 편 후
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	소속	국과위 사무처로 독립
교과부 국장급 공무원	사무처장	실장급 공무원
30명 이내	인원	120명 내외
전원 공무원 구성	직원구성	공무원 + 민간전문가 (예시, 50 : 50)

국과위 기능강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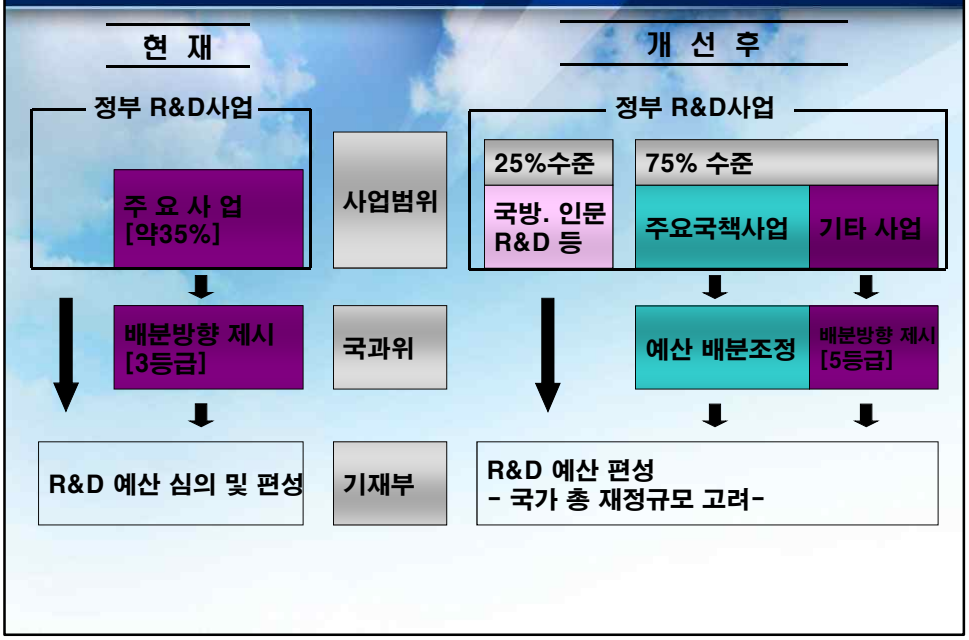
전주기 R&D 체계 구축

	현 재	개 편 후
사전기획	각 부처, 연구기관 등	국과위 (범부처 연계사업 등)
재원배분	국과위 예산 배분방향 제시	국과위 예산 배분방향 제시 및 주요 국책사업 예산 배분·조정
	기재부 예산 배분·조정·편성	기재부 예산편성
성과평가	각부처 자체평가	각 부처 자체평가
	기재부 상위 및 특정평가	국과위 상위 및 특정평가

국과위 기능강화 ②

R&D 재원 배분체계 개편

<R&D 예산 배분체제 개선 전. 후 비교>



국과위 기능강화 ③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 국과위 주관으로 범부처 최상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
  각부처는 소관분야 과학기술 계획 수립

-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종합조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과위가 확정하고,
  각부처는 조정결과를 소관 과학기술 시책에 반영

  ※ 국과위는 조정결과 중 관련 사항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법률 개정 추진

국가과학기술 행정체계구축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 국과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사무를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
  - 평가 업무 주체를 기획재정부⇨국과위로 변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① –국과위 조직 설계 관련–

국과위 설치 및 소관사무	과학기술 정책조정 및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사무처 설치	별도의 직제를 가지는 **독립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1급 고위공무원**으로 함
위원회 구성	**위원장(장관급) 및 상임위원(차관급 2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총 10명(임기3년, 1회 연임 가))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 총괄 • 예산관련 업무 수행시 중앙관서의 장으로 봄 •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② –국과위 기능 강화 관련–

과학기술 기본계획수립	국과위에서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을 수립**
국가R&D사업 일부 예산 배분·조정	국가R&D사업 예산에 관한 **배분방향과 함께 예산 조정 내역을 기재부에 통보**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	**국과위** ➡ 예타 대상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 **기재부** ➡ 적합판정 사업 중 **예타 사업선정**
기술예측, 표준분류체계	기술예측,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행주체 변경(교과부 장관 → 국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 (안)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체 등을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 **성과평가계획 마련 및 성과목표, 지표의 설정 주체**
-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주체**
-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
-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

→ **국과위**

구 분	당초 정부(안)	변경 정부(안)
위원회 형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좌 동
위원 구성	*15명(상임 4명, 비상임 11명)	*10명
위원장	*대통령	*장관급
부위원장	*장관급	
상임의원	*상임의원(차관급, 2명)	*상임의원(차관급, 2명)
자체 직제. 예산. 인사	*가능	좌 동
사무국	*교과부에서 분리 -> 사무처로 확대	좌 동
장. 단점	<장점> *대통령의 위원장직 수행으로 강한 조정력과 대외적 위상 강화 <단점> *대통령의 바쁜 국정 운영상 위원회의 전념 및 적시 개최 어려움(년 2~3회 개최) *대통령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 및 법적 책임성 논쟁으로 법안 통과 및 국과위 체제 구축 지연	<장점> *장관급 위원장의 위원회 전념으로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 *위헌소지, 법적 책임성(대표. 집행권, 감사)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음 *상임의원 중심체제를 갖춤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가능 <단점>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낮추었다는 일부 비판 우려

<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비교

항목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조정 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상설	·종합과학기술회의 ·상설(4명 상임의원)	·다수의 자문기구 활용 (과학기술위, 기술전략위, 수석과학자문관위 등)
위원장 간사	·장관급	·대통령 · OSTP실장	·총리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
예산 조정	·국과위 예산 배분방향 설정 ·기재부에서 예산 배분 ·편성	· OSTP와 긴밀한 협의 하에 관리예산실 (OMB)에서 조정 · 배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우선 순위 및 예산편성 의견제시 ·재무성에서 예산 편성	·연방 재무부가 총괄
사무국 인원	·120명 내외 (전문가 포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STP) ·60명 내외(전문가 포함)	·내각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하부 정책총괄관실 ·100명 내외(전문가 포함)	-
대통령 보좌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OSTP실장, 장관급)	·과학기술정책담당 특명대신 (장관급)	·다수의 자문기구

Ⅲ. 기대효과

전문성 · 독립성 강화로 범부처 조정기구 위상 정립

- 대통령 소속 상설 · 행정위 전환 → 독립성과 행정력 강화
- 민간 상임위원 및 민간전문가 채용 → 전문성 제고

정부R&D 종합조정력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예산배분 · 조정 및 평가기능 확보 → 실질적 종합조정력 강화

Ⅳ. 향후일정

'10.10.20 일까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0.11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10. 11월	법률(안) 국회 제출
'10. 12월~ '11. 2월	법률(안) 국회 통과
'11년 상반기	개편 국과위 출범

선진화된 과학기술행정체계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